

‘金값’ 올 들어 50% 뛰더니, 2주간 日평균 2%씩 들쭉날쭉

흔들리는 ‘안전자산’

금값 변동성 40여년 만에 최대
美 관세정책·중동 전쟁 등 영향
비트코인 보다 변동성 더 커져

금(金)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금 가격이 올해 들어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 가격의 변동성이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앞질러 비트코인이 차세대 안전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 ‘金’ 가격 변동성 극심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거래에서 12월 인도물 국제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4019.70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일보다 118.10달러(2.85%) 급락했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다. 지난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4359.40달러와 비교해서는 339.70달러(7.8%) 급락했다. 1주일간 국제금 가격의 일평균 등락폭은 2.55%에 달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고가를 수 차례 경신하는 한편, 가격 변동성에서도 사상 최고 수준을 지속 중이다. 올해 초 온스

당 2669달러 수준이었던 금 가격은 10개월 만에 약 50.6% 상승했지만, 지난 2주간 일평균 변동성은 2.15%에 달해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금 가격의 연평균 변동치는 16.2%였다. 일 평균 2% 이상의 최근 금 가격 변동성은 전통적인 금 가격 변동성의 수십배에 달한다. 금은 전통적으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투자상품’으로 여겨지면서 그 역할이 흐려지고 있는 것.

◆ ‘불확실성’에 변동성 확대

올해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동유럽·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꼽히지만, 최근 금 가격 변동성은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른(업무 일시정지) 장기화에 기인했다. 당초 2주 이내에 끝날

것으로 여겨졌던 섣다른이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1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에 이견을 보이면서 섣다른 상태에 돌입했다. 당초 2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 여겨졌던 섣다른은 4주째 이어지고 있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

높은 금 수요는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지만, 단기간의 가파른 가격 상승에 차의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국제금 가격은 전일 사상최고가 기록에 따른 차의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일 대비 250.3달러(5.74%)나 급락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금(金)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1BTC당 11만 달러 전후로 가격이 고착화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5월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겼는데, 이후 등락을 지속하며 11만 달러 전후에 ‘박스권’을 형성했다.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일평균 1.50%다. 같은 기간 금 가격의 변동성인 2.55%와 비교해 1.05% 포인트(p) 낮다. 올해 초와 비교한 가격 상승률도 21.92%에 그쳐, 금 가격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

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여겨졌는데, 금 가격보다도 변동성이 낮아진 것.

비트코인 우세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될 경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만큼, 일정한 희소성에 힘입어 ‘가치 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채굴이 완료된 비트코인은 1960만개로, 비트코인은 몇 차례의 반감기를 거쳐 오는 2140년까지 발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TF 승인 이후 지속되는 자금 유입과 헤지(위험 분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증가는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기관·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비중은 전체 발행량의 약 15.5% 수준으로,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간 내에 기존 현물자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SEC의 ETF 승인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전통적 자산에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namuh

나무증권,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게

수수료 제로고침

신규 고객 및
조건 충족 시 (~12.31)

해외투자 새로고침

나무증권에서
경험하기



미국 주식 거래 / 환전
수수료 제로

\$30 투자 지원금
시작 부담 제로

최대 6만원 캐시백
시드 걱정 제로

AI투자 솔루션
투자 고민 제로

[이벤트 유의 사항] 수수료 제로고침 이벤트 기간: ~25년 12월 31일. 이벤트 대상: 당사 최초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조건 충족 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혜택 기간: 신규 고객은 계좌 개설 일로부터 12개월, 기존 고객은 26.02.28까지 [투자 유의 사항]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시 수수료 및 제비용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미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25%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미국주식 매매 시 SEC Fee(0.00278%)) (예시) 중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3%(선정형/무강동 동일,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중국 선정형/무강동 기준, 매수 시 Handling Fee 0.00341%, Securities Management Fee 0.002%, Transfer Fee 0.003%, 매도 시 Stamp Fee(인지세) 0.05%, 인/오프라인 동일)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중보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343호(2025-04-02~2026-04-02)

5명 中 1명 월급 200만원 ↓ 임금근로자 양극화 더 심화

국가데이터처, 근로자 2241.5만명
200만~300만원 30.6% ‘가장 많아’
명목임금 상승, 상·하단 양극화 확대

국내 임금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500만 원 넘는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총 22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 원이 30.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300만~400만 원(22.4%) ▲500만 원 이상(16.3%) ▲400만~500만 원(11.2%) ▲100만~200만 원(9.9%) ▲100만 원 미만(9.6%) 순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19.5%)은 월급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상황에서 고용시장 내 ‘상·하단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로 500만 원 이상(1.4%p)과

100만 원 미만(0.2%p) 비중이 함께 늘어났다. 반면 200~300만 원(-1.6%p), 100~200만 원(-0.8%p) 구간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일자리 비중도 대다수 단순 판매·청소·돌봄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됐다. 매장 판매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만 명 줄었으나 전체로는 153만9000명(5.3%)을 기록해 가장 많은 취업자를 기록했다.

청소 관련 종사자도 4만6000명 늘어 127만2000명(4.4%), 요양보호사·간병인은 4만3000명 늘어 46만8000명(1.6%)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었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사회복지관·방문복지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